

# “이자 최대 3%p 지원”...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대폭 확대

고용부-근로복지공, 봄철 맞아 새 학기·결혼 등 금융 부담 완화  
학령기 자녀 가구까지 대상 포함  
노부모양비·장례비 항목 신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용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새 학기·결혼 시즌 등 지출이 집중되는 봄철을 맞아 노동자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이차보전 용자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 중 최대 3%포인트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연 6%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정부가 절반 수준인 3% 이자를 대신 부담해, 첫째에만 약 60만 원의 이자 절감 효



Gemini에 의해 생성된 새 학기와 결혼 등 봄철 집중되는 지출 현상을 묘사한 일러스트 이미지.

과가 발생한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지원 대상이 크게 넓어졌다. 기존 '7세 미만'이던 자녀 양육비 지원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해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까지 포함했

다. 교육비 부담이 큰 가계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중심이던 지원 항목에 노부모양비와 장례비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생애주기 전반의 필

수 지출을 포괄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지원 한도는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 최대 2000만 원, 장례비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신청 요건도 완화됐다. 혼례비의 경우 기존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신청 기간이 늘어나 제도 활용 폭이 확대됐다.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3개월 이상 1인 자영업자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약 535만 원 수준) 이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안정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

고 있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확대된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가계경제 부담이 완화될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이자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일하는 노동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용자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 정상 경제외교 의제, 기업이 직접 제안한다

산업부 '기업 헬프 데스크' 운영  
정상 경제외교 실효성 높여

산업통상부가 정상 경제외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23일부터 정상 경제외교 관련 기업 의견을 수시로 접수하는 '기업 헬프 데스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상외교는 그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수출 확대는 물론 현지 애로 해소의 계기로 활용돼 왔다. 다만 사전 준비 과정에서 기업 의견 반영이 제한적

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다 체계적인 의견수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제외교 활용포털' 내에 '기업 헬프 데스크'를 신설했다.

해당 창구를 통해 기업들은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필요한 의제나 애로사항을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은 국가 방문도 건의할 수 있다.

산업부와 관계기관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 검토·협의해 향후 정상 경제외교 일정과 의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포털 내 관련회원 인증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향후 국가 정보 보안지침에 따른 추가 보안을 거쳐 간편 인증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헬프 데스크 운영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기업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배준형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기업이 헬프 데스크를 통해 정상회담 의제와 국가 방문을 제안하면,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제외교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산업부, '3기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개시

사전 준비부터 지방정부 참여 강화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한 3기 특화단지 지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3기 소부장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1기, 2023년 2기에 이은 세 번째 지정으로, 지역 기반 공급망 협력 생태계 확대가 목표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연구기관 등을 한데 모아 집적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과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 1·2기 특화단지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전략 산업 중심으로 조성됐으며, 약 11조5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15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3기 지정은 사전 준비 단계부터 지방정부 참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는 공모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약 두 달간 '예비검토제'를 도입해 총 12개 시·도의 21개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앵커기업 확보, 타깃 품목 설정, 투자계획 보완 등 핵심 요소에 대한 컨설팅이 이뤄졌다.

공모 접수는 3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 선정은 민간 평가위원회 평가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산업부는 4월 1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예비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보완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오늘부터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 시행

비용 50%, 최대 250만원 지원

해양수산부가 이달 23일부터 '바다내비 단말기 8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한다.

바다내비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우리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전자해도, 주변 선박 정보, 충돌·좌초 경보, 해양안전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선박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에 따라 2021년 1월30일 이후 건조되거나 수입된 선박은 바다내비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수부는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 기반 확대 및 선주 비용부담 절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시행되는 8차 보급사업에서는 어선과 일반선박을 대상으로 단말기 구매와 설치 비용의 50%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실현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 등 검토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정부는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역농협 내 여성 이사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형식적 참여 확대에서 실질적 지위 향상 ▲개별 사업 중심에서 정책 거버넌스 구축 ▲보호·복지 중심 지원에서 핵심 경제주체로의 성장 지원 ▲돌봄·건강 공백 해소를 위한 농촌 맞춤형 지원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촌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신장과 성평등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구상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이들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농협 이사회 성별규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농협 여성 이사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을시장 선출의 경우 성평등 방식(1세대 1표→1인 1표)의 확산을 유도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2026년 1차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심의회. /농식품부

또 농촌지역 성평등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농촌 특화형 성평등 교육을 확대·강화한다. 농식품부 소관 사업 참여자와 농업 분야 고용주·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여성 정책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촌 여성정책과 신설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전담부서·인력 확보 등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촌의 핵심 경제 주체로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농업·돌봄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탄력적 일자리를 발굴·확산하고 가족경영협약 활성화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남부발전, 부산 AI·ICT 中 企 판로 확대

베트남 K-디지털 혁신 시장개척단

한국남부발전이 부산 지역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에 나선다. 기존 호치민 중심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하노이까지 판로를 확대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본격 추진한다.

22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2026 베트남 K-디지털 혁신 시장개척단'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기반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벤처기업협회와 함께 2025년부터 협업해 온 프로그램이다.

베트남은 정부 주도의 디지털 경제 육성 정책에 힘입어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시장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 지역 ICT 기업 10개사는 호치민에서 총 56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추진하고 9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남부발전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시장개척단 파견 지역을 하노이까지 확대한다. 파견 일정은 오는 5월 26일부터 31일까지다.

참여 기업에는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현지 진출 전략 세미나 ▲한·베 ICT Meet-up Day ▲현지 유관기관 방문 및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올해는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1000만 달러 규모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태길 남부발전 자원전략처장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수출기업의 경영 악재가 커진 만큼 수출시장 다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남부발전의 네트워크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ICT 기업이 거대 신성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개척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1일까지 부산벤처기업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